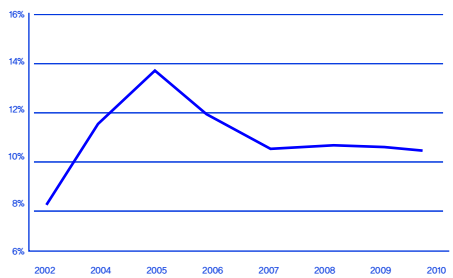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 미래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

2011년 여름 런던 토트넘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민자 폭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책당국자에게도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미래의 일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011년 기준 211,458명으로 이들 중 89%인 188,580명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 국제결혼 비율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점차 둔화되어 2010년에는 전체 혼인건수(326천건)의 약 10%인 34천건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다. 국제결혼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집단의 육성과 활용이 용이하며, 이는 사회문화의 다양성으로 이민국가인 미국과 같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가구의 59.7%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이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도 21.3%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및 가족안전망 약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고립과 소외로 이어져 사회 · 문화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빈곤층의 증가, 인종 · 계층간 갈등에 따른 사회불안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처음으로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정책간 충돌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단위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황과 역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01개의 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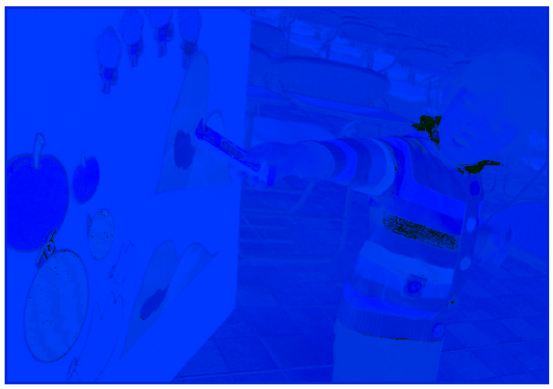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전체 다문화가족의 25% 수준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별로 분류하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요자의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는 한국어교육이 있다. 결혼이민자 중 초기입국자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전문 한국어 교사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지고 결혼이민자가 원할 경우 방문교육도 가능하다. 이밖에 가족생활,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부부나 배우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통합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에서 출산, 아동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보살피는 등의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자녀생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영재교실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자녀생활서비스는 직접 다문화가족 아동의 생활을 보살피는 서비스로서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정체성 확립 등 정서적 분야의 지원뿐만 아니라 숙제지도, 독서지도 등 인지영역 발달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등 대상아동 생활전반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는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사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한국어 발달이 뒤처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전문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서비스이다. 언어영재교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엄마(아빠) 나라말 배우기를 통해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중언어 습득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저소득층으로 머물러 있음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통·번역사, 언어영재교실의 이중언어 강사들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전문성 활용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결혼 이민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388명의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정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하면, 부처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업중복의 문제, 선심성·일회성 행사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또한 여느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혼이나 사별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재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현재까지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이 이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자원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상황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행정사무관

eloph@korea.kr